

멀어져 가는 여야 합의… 정국 경색 심화

3당 원내대표 입장차 커 국회 정상화 실패

비정규직법·미디어법 싸고 정치공방만 여전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선진과 창조의 도모' 문국현 원내대표는 5일 회담을 갖고 최대 잠정인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의 타결을 시도했으나 서로 기준 입장차를 고수하면서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회담에서 안 원내대표는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법에 대한 유예조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일단 법 시행 유예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사태에 제동을 걸고, 유예기간 국회 특위를 가동해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을 찾고 있다.

유예기간으로 당초 3년을 주장했지만,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1년6개월 유예안을 받아들였다가 이날 1년으로까지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유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 유예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돋는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주장이다.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예 불가 주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한나라당이 이날 제안한 1년 유예안과 6개월의 간극만 존재한다. 타협의 여지가 남은 것이다.

◇미디어법=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여야의 쟁점이 복잡하다.

한나라당은 법 내용을 대폭 수정하더라도 일단 통과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도 겉으로는 '6월 임시국회에

서 표결처리한다'는 여야 합의를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법의 핵심인 신문방송 결영 허용도 2013년 이후로 미루고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보유 지분 비율 상한도 애에 '0%'로 낮추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통과를 서두르는 것은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를 비롯한 하반기 예산 및 법안 처리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막아서는 민주당이 설 땅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우선 합의처리로 해놓고 여론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거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

또 합의처리를 거부하다가 힘에 밀려 한나라당 원안대로 통과하도 해주면 그 뒷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결국 시간을 벌면서 최대한 법안을 수정해 무력화시키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기국회 이후 처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여론수렴 절차 및 언론시장 환경에 대한 기초조사가 부실한 상황에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이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도중 "비정규직 해고사태는 없었고 오히려 공기업의 해고만 드러나고 있다"며 비정규직법 시행을 촉구하며 울먹이고 있다.

/연합뉴스

■ 49재 앞둔 親盧 어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가 오는 10일 치러지면서 이후 친노(親盧) 진영의 진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상중(喪中)'이라는 이유로 정치 행보를 극도로 자제했지만 49재 이후에는 향후 행보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5일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친노의 행동 방향은 신당 창당을 통한 독자세력화, 민주당 합류, 제3지대행(行)의 3가지 정도.

우선 과거 개혁당과 열린우리당 시절 참정연 출신의 친노 강경파 일부 인사들은 연내 목표로 신당 창당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으로는 정치 개혁이라는 국민

신당-민주 합류-제3지대 '갈림길'

盧 전 대통령 명예회복 명분 향후 행보 논의 구체화될 듯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만큼 새 정당으로 승부를 건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도 통합을 강조한 고인 유지에 비춰 분열하면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신당 창당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민주당은 '민주개혁진영'의 통합을 내세워 49재 이후 복당 추진 등 친노 끌어안기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친노의 결합을 지지대로 영남 지지층의 결집도를 높여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정당

화에 한걸음 다가겠다는 포석도 엿보인다.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에 현명숙 전 총리, 서울시장 또는 대구시장 후보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부산시장 후보에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경남지사 후보에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 등의 이름이 벌써부터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주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친노그룹의 반감

이 여전히 만만치 않아 일단 제3지대에서 머물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연합 전선을 펴거나 당에 전격 합류하는 식으로 '헤쳐보여' 하는 '제3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친노그룹은 설불리 세기에 나설 경우 자칫 서거정국에 편승하는 것으로 비쳐져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여전히 친노의 행보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집중 거론

8일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8일 열릴 예정인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백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의혹과 국세 행정의 경험이 없다는 점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장 내정 직후만 해도 국세행정의 경험이 전혀 없는 탓에 전문성이 의심받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도덕성까지 점점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런 점을 고려,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재정위 소속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최근 "백 후보자는 1998년부터 3년간 집중적인 부동산 거래를 통해 20억원이 넘는 차액을 올렸다"며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또 백 내정자가 서울시 시장·개발연구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민간보험회사 사외이사와 대학 초빙교수를 겸직해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백 내정자는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용인

땅 뿐으로 매매차익은 3억5천만원에 그쳤다"고 해명했고, 겹침에 대해서는 "시정연은 재단법인으로, 연구원장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겹침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백 내정자의 전문성 문제와 관련, 재정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세 행정 이해력을 끔꼼히 따지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만한 인물인지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백 내정자는 금융과 증권 분야의 경제학자로 세무 행정과는 인연이 없다. 더욱이 그 동안 국세 행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돼 청장은 내부 인사가 승진하거나 외부 인사라 하더라도 관련 분야의 경험이 있는 인물이 발탁됐다.

국세청에서는 그러나 "처음 걱정했던 것과 달리 백 내정자의 업무 이해력이 무척 뛰어난다"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검증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백 내정자가 이른바 'S라인(서울시청)' 출신이라는 점에서 과연 국세청의 정치적 종립성이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민 100만명 만나 어려움 듣겠다"

한나라 연말까지 국민소통

서민 100만명에게 듣는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당 245개 당원협의회에 각 20명으로 구성된 추진 본부를 설치하고 이들이 매주 10명씩 5천명을 접촉해 연말까지 20주 동안 100만명으로 부터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전국 단위로 기구를 조직하고 중앙에서는 김기현 안중준 강명준 의원이 부분부장을, 고승덕 의원 등 20명이 간사를 각각 맡기로 했다.

/연합뉴스

선진 '줄타기 행보' 딜레마

한나라와 비정규직법 공조

자유선진당의 입지 확대를 위한 '줄타기 행보'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선진당은 최근 제3정당으로서 존재감 확보를 위해 선명 야당을 자향하는 동시에 '따뜻한 보수'를 내걸고 한나라당과 차별화를 구축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다른 야당과는 선을 끊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여당이 '중도 강화론', '친서민'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따뜻한 보수'라는 가치마저 빼앗길 위험에 처해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영향으로 덧밭인 충청권에서 조차 민주당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다.

는 '불편한 동거'를 정리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선진당은 당초 여당의 '단독 국회'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등원,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왔다.

또 비정규직법과 관련, 선진당이 제안한 '1년6개월 유예안'과 국회 비정규직특위를 한나라당이 전격 수용하면서 야당이 공조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다른 야당과는 선을 끊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여당이 '중도 강화론', '친서민'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따뜻한 보수'라는 가치마저 빼앗길 위험에 처해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영향으로 덧밭인 충청권에서 조차 민주당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등산 천지산악

코베아 오토캠핑 전품목 20% 할인 행사

7월 18일까지

신청 ☎ 431-1187 광주산악연맹

7월 12일(일)

▶ 광주4050산악회 전용, 전야 유장 7월 12일(일) 7시 6시 30분 출발, 6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7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 광주4050산악회 전용, 유장 7월 12일(일) 7시 30분 출발, 6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7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 광주4050산악회 전용, 유장 7월 12일(일) 7시 30분 출발, 6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7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 광주4050산악회 전용, 유장 7월 12일(일) 7시 30분 출발, 6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7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 광주4050산악회 전용, 유장 7월 12일(일) 7시 30분 출발, 6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7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 광주4050산악회 전용, 유장 7월 12일(일) 7시 30분 출발, 6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7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 광주4050산악회 전용, 유장 7월 12일(일) 7시 30분 출발, 6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7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 광주4050산악회 전용, 유장 7월 12일(일) 7시 30분 출발, 6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7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 광주4050산악회 전용, 유장 7월 12일(일) 7시 30분 출발, 6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7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 광주4050산악회 전용, 유장 7월 12일(일) 7시 30분 출발, 6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7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 광주4050산악회 전용, 유장 7월 12일(일) 7시 30분 출발, 6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7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 광주4050산악회 전용, 유장 7월 12일(일) 7시 30분 출발, 6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7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 광주4050산악회 전용, 유장 7월 12일(일) 7시 30분 출발, 6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7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 광주4050산악회 전용, 유장 7월 12일(일) 7시 30분 출발, 6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7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 광주4050산악회 전용, 유장 7월 12일(일) 7시 30분 출발, 6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7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 광주4050산악회 전용, 유장 7월 12일(일) 7시 30분 출발, 6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7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 광주4050산악회 전용, 유장 7월 12일(일) 7시 30분 출발, 6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7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 광주4050산악회 전용, 유장 7월 12일(일) 7시 30분 출발, 6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7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 광주4050산악회 전용, 유장 7월 12일(일) 7시 30분 출발, 6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7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 광주4050산악회 전용, 유장 7월 12일(일) 7시 30분 출발, 6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7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

▶ 광주4050산악회 전용, 유장 7월 12일(일) 7시 30분 출발, 6시 30분에 애완동물과 함께 출발,